



# 여성정책동향

- 여성정책동향 (2009년 4/4분기)  
최 윤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 2009 연구보고서 소개
- 2009 연구보고서 목록

## 여성정책동향 (2009년 4/4분기)

최 윤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올해 4분기에는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도 많은 기간이었다. 올해 마지막 시점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여성정책 동향들을 짚어본다.

### 정부, 국가 수준의 저출산 해법 내놓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올해는 1.12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국가 수준의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을 제시하였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지난 제6차 보고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응 전략의 두 축은 '보육비 경감'과 '인구 늘리기'다. 보육비와 교육비를 줄여 돈 걱정 없이 아이를 기를 수 있게 하고, 미혼모 가정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가장 파격적인 대책은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문제이다. 여기에는 취학연령이 1년 앞당김으로 해서 올해 정부가 만 5세의 보육료 지원에 쓴 예산(1356억원)과 유치원 지원 예산(2720억원)을 향후에는 0~4세의 보육비 지원 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계산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담당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와 관련해 하루 전에 통보를 받는 등 부처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다 유치원들의 교육도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셋째자녀에 대한 특혜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출생할 셋째 이후 자녀와 부모에게는 대입 특례입학과 부모의 직장 정년 연장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최근의 고용문제를 이용한 대책으로 정책의 실효력은 높지만, 대학과는 물론 민간 기업과의 사전 조율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20년 후에도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하나의 파격적인 대책은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출산을 한 경우라면 기혼 부부와 동일한 지원을 함으로써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에도 낙태보다는 출산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초 재정전략회에서 가급적 많은 미혼모 지원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이명박 대통령도 초국가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 이대통령은 “지금의 저출산 상황은 과거의 속도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관계부처 간, 이해 당사자 간

문턱을 낮추고 난상토론을 벌여서 결론을 도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제시된 대안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특히 취학연령을 만 5세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학계, 학부모들의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율이 매우 저조하고,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 중 60%가 직장보육시설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지금까지 제시된 저출산 대책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책을 생산하기 보다는 기존의 정책의 실효성을 촉구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예산지원을 하기보다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우는 식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정책의 실행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아동성폭력 범죄

2009년도 하반기 가장 뜨거운 사회적 이슈 중의 하나는 바로 ‘조두순 사건’, ‘은지사건’과 같은 아동성폭력 문제일 것이다. 8세 여아에게 성폭행을 가해 영구 장애를 남긴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의 아동성폭력에 대한 미미한 대처와 사태의 심각성을 두고 온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시 한 포털사이트에서 ‘아동 성폭행은 살인행위! 법정최고형에 피해보상까지 하라’는 주장에 대해 26만명이 넘는 서명이 몰리고, 청와대를 비롯해 법무부와 여성부 등 관련 부처의 홈페이지가 마비될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무시되던 아동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수사관행과 우리사회의 대처방식을 다시 꼬집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법원이 아동의 진술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아동의 학교 친구까지 증인으로 소환하는가 하면, 피해상황을 똑같이 재연해 보라고 요구하기도 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은 오히려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동성폭력 수사 전문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하여 충분하고 세심한 대처가 불가능한데다 사건 종료 후 피해아동과 가족들이 받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아동성폭력 문제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와 주취 감경 등의 문제였다.

이에 대해 실제로 정부에서는 아동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성인 때까지 정지·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공소시효 폐지, 유기징역 상한 최대 50년, 화학적 거세 등을 뼈대로 하는 ‘아동 성범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수사 중이라도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공개가 확정되면 인근 주민에게도 우편으로 이를 알리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주취 감경에 대해서도 어린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한 경우에도 감형할 수 없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을 만큼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아동성폭력 문제가 이번만큼은 냄비근성이 아닌, 실질적인 법적·정책적 개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여성부, 확대개편 논의되고 있어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가족업무를 당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상당부분 축소되었던 여성부가 가족, 청소년 등의 업무를 다시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개편 논의는 백희영 신임 여성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족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문제는 어느 선까지 이관할 것인지 이다. 복지부에선 설령 가족·청소년 업무를 이관하더라도 보육 업무만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여성부는 가족·청소년·보육업무 모두를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10월 이은재 의원(한나라당 여성위원장)은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이 여성부로 이관돼 지금의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확대되고, 동시에 지금의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동·보육 업무가 빠진 채 청소년·가족 업무만 여성부로 이관되는 수준이다.

한편, 얼마 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현재 여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족과 시설 외 아동 보육, 옛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흡수·통합한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업무 등의 기능을 가져오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업무도 여성부 담당 업무에 추가된다.

여성계를 비롯하여 일각에서는 여성부의 확대개편을 반기는 분위기이나 지난 2년의 업적에 대해 아무런 평가 없이 개편된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 관련 업무가 분리된다는 점도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 사생활에 국가 개입할 수 없어

지난 11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을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56년간 유지되어오던 혼인빙자간음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현재는 혼인빙자간음죄가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사실상 국가 스스로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해왔으며, 이는 여성의 존엄과 가치를 역행한다고 판결배경을 설명하였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1년 형법개정 작업시부터 논란이 되었고, 실제로 지난 2002년에는 7대2로 합헌결정이 내려진 적도 있었다. 또한 사실상의 범죄 입증이 어려워

실제로 기소되는 건수(연간 20~30건)가 매우 미미해 그 실효성 논란도 있었다. 그동안 여성계는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를 주장해왔으며, 여성부도 실제 지난 9월에 열린 공개변론에서 혼인빙자간음죄가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여성계를 비롯하여 남성들 또한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이에 대한 대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의 성적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를 대신할 이른바 '성적강요죄'의 본격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 형법 개정안으로 신설돼 내년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성적강요죄'의 실효성 있는 추진이 보다 강하게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여성부, 일·가정 양립 가능한 '퍼플칼라' 만든다

백희영 여성부장관은 취임 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퍼플 칼라' 직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의 차원에서 여성들이 탄력적 근무제도가 가능한 직종이 시급히 요청됨에 따라 여성부는 근무의 양이나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직종, 즉 퍼플잡(purple job)을 개발할 계획이다. 퍼플(보라색)은 빨강과 파랑이 섞인 것으로 퍼플 칼라 직종이란 색채가 혼합되듯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과 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직업군을 뜻한다.

여성부는 개인의 여건에 따라 교대 횟수나 근무 시간, 연봉 같은 조건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무 형태를 더욱 다각화하는 동시에 이를 많은 사업장에 확산시킬 예정이다. 여성부는 이미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CEO 초청 포럼'을 개최하는 등 '퍼플칼라·퍼플잡' 알리기에 본격 나섰다. 이 자리를 통해 여성부는 중소기업에서의 퍼플칼라, 퍼플잡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소기업 CEO의 의지와 결단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퍼플칼라' 직종은 "남녀평등이 어느 정도 이뤄진 다음에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장되는 것"이라며 '퍼플칼라'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여성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정책의 기본 계획을 확정짓고, 퍼플잡 적합 직종 발굴 및 퍼플잡 확산 시책 마련, 퍼플잡 남녀 근로자 활용 확산하는 등 당분간 '퍼플잡'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병무청, 군가산점제 재추진

병무청이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직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을 기피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풍



토가 조성돼야 한다며,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복무 가산점 제도는 지난해 6월 한나라당 김성희 의원이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발의했으나, 논란이 가열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기관이나 기업의 취업시험을 볼 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군가산점제도는 지난 1999년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는 사안으로 이번 병무청의 군가산점 부활에 대해 여성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성부 또한 이에 대해 평등권을 거스르는 명백한 위헌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1999년 위헌 판결 당시, 현재는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만점을 받고도 불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며, 군가산점제가 합격 여부를 결정적으로 좌우한다는 이유로 위헌을 판결하였다. 이를 감안하여 병무청에서는 이번 군가산점제도는 적용 수위가 전보다 낮고, 횟수에도 제한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준의 가산점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도, 여성의 경우 현재의 합격률에서 최대 15%까지 그 비율이 하락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 15%까지 합격률이 높아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합격 당락을 결정짓는 유의미한 요소라는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 또한 매년 높아지는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과 청년 실업률을 감안할 때 군가산점제 부활안이 공직 채용에서의 합격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양성평등 관련 지표들 순위 발표

### 한국, 여성권한척도 61위, 성 격차지수 115위

유엔개발계획(UNDP)이 109여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09년 여성권한척도(GEM)'에서 우리나라는 61위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68위보다 7위가 상승한 것으로 최근 3년 내 가장 높은 순위이며, 총점수로 0.55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점수이다. 이렇게 순위가 올라간 것은 여성의원 비율이 작년 13.7%에서 14.0%로, 여성행정관리직 비율이 작년 8.0%에서 9.0%로 조금씩 상승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관리직으로 분류되는 입법,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에서의 여성비율은 9.0%에 불과하여 평가대상국가 전체평균인 27.9%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상승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세계 중상위권으로는 진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09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34개국 가운데 115위를 기록하여 세계 최하위수준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를 제외한다면 산업화 국가 가운데 사실상 꼴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1을 기준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 수준이 높은 성격차 지수에서 올해 한국은 0.6146이며, 1위인 아이슬란드는 0.8276로 기록되었다. 특히 한국은 여성의 정치적 권한 부문과 경제적 참여와 기회 부문에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여성의 고위 관리직과 전문직, 기술직 진출이 현저히 적고, 남성과의 임금 격차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큰 것으로 조사됐다.

## 공공부문 관리직여성 핵심역량 강화 지원방안

- 영문제목 : Studies to strengthen the Core-Competency of Female Managerial-ranks in the Public Sector
- 연구책임자 : 문미경
- 공동연구진 : 김혜영, 금창호
- 발행일 : 2009. 12. 31
- 보고서 번호 : 2009 연구보고서-15
- 구 분 : 기본과제

### ■ 연구목적

현재 공직내 성비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2008년 여성공무원 비율은 40.8%이며, 특히 행정고시(51.2%)와 외무고시(65.7%) 여성합격률이 과반수를 넘는다. 공직에서 관리직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하게 높아짐에 따라 성비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조직문화와 구조를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의 역량 또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직에서 관리직 여성공무원들의 성장과 역량발휘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여성공무원 개인에게는 원활한 경력개발을, 정부조직과 국가차원에서는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내 급속하게 변화하는 남녀공무원의 성비를 분석하였다. 둘째, 역량관련 기존문헌들을 검토한 후 역량중심의 인적자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본 연구를 위한 역량군과 역량지표들을 도출하였다. 셋째, 도출된 역량군과 역량지표들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직 남녀공무원을 대상을 역량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넷째, 조사분석과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개인적·조직적·사회문화적 수준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는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진입 이후의 경력관리나 육성보다는 채용단계에서 여성공무원들의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던 대표성관련 연구보다 한걸음 진전된 연구내용이라 하겠다.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평등 지수 관리 방안

- 영문제목 : The Management of Gender Equality Index for the Advancement of Korean Global Competitiveness
- 연구책임자 : 전기택
- 공동연구진 : 문유경, 주재선
- 발행일 : 2009. 12. 31
- 보고서번호 : 2009 연구보고서-19
- 구 분 : 기본과제

### ■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각종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성평등 및 국가경쟁력 관련 지수를 통해 성평등과 국가경쟁력의 관계를 밝히고,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성평등 지수와 그 관리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각국 정부가 자신들의 국가경쟁력 및 성평등 상황 점검 및 정책 목표 설정에 활용하는 국제기구의 성평등 및 국가경쟁력 관련 지수를 분석하여 성평등과 국가경쟁력의 관계를 밝히고, 향후 개선이 요구되는 성평등 지수와 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는 성평등과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국내외의 주요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각종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지수와 성평등 지수의 체계 및 우리나라의 순위 변화, 국내외의 성평등 지수 관리 실태를 검토하였다. 또한 UNDP의 남녀평등지수(GDI), 여성권한척도(GEM), 인간개발지수(GDI)가 WEF의 국가경쟁력 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과 우리나라 여성권한지수의 하위지표 변화에 따른 여성권한지수의 점수 및 순위 추정을 실시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 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정책이용실태 및 일가족 양립현실

- 영문제목 : Working Parents and Work-Family Balance in Sweden, the UK and Korea
- 연구책임자 : 홍승아
- 공동연구자 : 이미화, 김영란, 이영미, 유계숙
- 발행일 : 2009. 12. 31
- 보고서 번호 : 2009 연구보고서-2
- 구 분 : 일반과제

###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08년도부터 2년간의 계획 하에 진행된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의 2차년도 연구이다. 2008년에 수행된 1차년도 연구는 주요 국가의 일가족양립정책의 최근 동향과 핵심정책을 연구한 정책비교연구이었으며, 2차년도 연구는 국제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스웨덴, 영국, 한국을 대상으로 하여 일가족양립정책의 기업의 실제 제도시행과 근로자들의 이용실태, 그리고 근로자들의 일가족양립의 경험과 현실에 초점을 두어 3개국을 비교 연구하였다.

### 연구내용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현황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3개국 기업들의 일가족양립지원과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과 기업의 운영실태를 살펴보았다.

근로자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3개국 근로자들의 자녀양육 형태, 일가족양립정책 이용실태를 살펴보았다. 동시에 3개국 근로자들의 실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노동생활과 가족생활, 이 속에서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가족 양립의 갈등 및 스트레스, 그리고 기업조직 내에서 이들의 양립현실과 기업의 지원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와 함께 심층면접을 병행하여 각국의 일가족양립 현실을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도록 하였다.

## 고학력 여성의 사업서비스업 진출 촉진방안

- 영문제목 : How to Attract Highly Qualified Women to the Business Services Sector
- 연구책임자 : 신선미
- 공동연구진 : 이해진, 이국희, 송창용
- 발행일 : 2009. 12. 31
- 보고서 번호 : 2009 연구보고서-14
- 구 분 : 일반과제

### ■ 연구목적

이 연구는 향후 양질의 고용증가가 기대되는 사업서비스 분야에 고학력 여성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서비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증가율이 높고 고학력 인력을 많이 활용한다. 사업서비스업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사업서비스업의 대표적인 직업 중에서 고학력 여성에게 유망한 직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 ■ 연구내용

사업서비스업의 여성 일자리 규모, 세부 업종별·직업별 여성 비율, 여성 취업자의 교육수준과 임금 등을 분석하고 고학력 여성이 진출하기에 유망한 직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직업(12가지)에 대하여, 각 직업의 일반적인 특징, 여성 취업자의 입직과정 및 경력개발, 인력 수요 및 채용 동향을 조사하여, 여성의 진출 확대 및 장애요인, 직업별 입직 경로와 특징, 여성의 진출이 기대되는 직무분야 등을 분석하였다. 조사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학력 여성의 사업서비스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 2009 연구보고서 목록(발간예정 포함)

2009 연구보고서-1	기초의회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남녀의원 의정활동 변화에 관한 연구 김원홍
2009 연구보고서-2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 일가족양립현실과 정책이용실태 홍승아, 이미화, 김영란
2009 연구보고서-3	남성의 균형적 삶을 위한 젠더의식 개선방안 이수연, 백영주
2009연구보고서-4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Ⅱ) : 성 주류화 실행 모델 개발 김경희, 양애경, 김돌순, 송치선, 이선민
2009 연구보고서-4-1	강원도 일자리 창출정책의 성 주류화 실행모델 개발 - 경제 · 정보화 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을 중심으로 박기남, 신경아
2009 연구보고서-4-2	부산지역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의 성 주류화 실행모델 개발 홍미영, 최청락, 홍선영
2009 연구보고서-4-3	지역정책에서의 성 주류화 실행모델 : 충남 다문화정책 및 대전 노인 일자리창출정책을 중심으로 김영주, 김경희
2009 연구보고서-5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Ⅲ) :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및 추진 역량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김영옥, 마경희, 김진, 이선행, 김효선
2009 연구보고서-5-1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 공무원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마경희, 김효선
2009 연구보고서-5-2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역량 진단 및 교육안 개발 마경희, 송인자, 김효선
2009 연구보고서-5-3	국내외 성인지 예산 운동 사례분석과 시민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김진, 김경희(중앙대), 이원희
2009 연구보고서-5-4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1) 보육예산에 대한 성인지 분석 : 2005년 ~ 2009년 김경희(중앙대), 안현미
2009 연구보고서-5-5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2)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 추정 문유경
2009 연구보고서-5-6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3) 실업급여제도 예산의 젠더분석 김혜란, 김은하, 배은경, 홍찬숙(서울대)
2009 연구보고서-5-7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4)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원종학, 김지영
2009 연구보고서-5-8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성인지적 분석 정해숙, 박선영
2009 연구보고서-5-9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6)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사업의 성인지적 분석 : 대상자 선정 기준의 타당성 검토와 소요예산 추정을 중심으로 김영택
2009 연구보고서-5-10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7) 녹색뉴딜사업에서의 여성일자리 규모 추정 김영옥, 이선행
2009 연구보고서-5-11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8)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지역의 성별 취업확률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모형 분석: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를 중심으로 이택면
2009 연구보고서-5-12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9) 공무원 교육훈련사업의 세출예산 및 임금효과 추정 조선주, 문미경, 임희정

2009 연구보고서-7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연구(Ⅲ)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 박선영, 박복순
2009연구보고서-8	2009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사업보고서 및 제2차 기초분석 보고서 (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y) 이택면, 김승연
2009 연구보고서-9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지원 방안 연구 조선주, 이선행
2009 연구보고서-10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김혜영, 선보영
2009 연구보고서-11	남녀공학 중등학교에서의 성별 교육실태와 향후 과제 정해숙
2009 연구보고서-12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Ⅲ): 일자리의 제도와 오은진
2009 연구보고서-13	여성 일자리이동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민현주, 임희정
2009 연구보고서-14	고학력 여성의 사업서비스업 진출 촉진방안 신선미
2009 연구보고서-15	공공부문 관리직여성 핵심역량 강화 지원방안 문미경, 김혜영
2009 연구보고서-16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 분석과 과제 김태홍, 유희정, 강민정
2009 연구보고서-17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 장미혜, 윤덕경
2009 연구보고서-18	여성자살 현황 및 정책방안 김영택, 김인순
2009 연구보고서-19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평등 지수 관리 방안 전기택, 문유경, 주재선
2009 연구보고서-20	청년층의 섹슈얼리티와 성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이미정, 변화순
2009 연구보고서-21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 사적생활영역을 중심으로 안상수, 김이선

## ※ 협동과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28-01	
2009 연구보고서-6	다민족 ·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3차년도) -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과 다각적 협력체계 증진방안 이선주, 민무숙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28-02	
2009 연구보고서-6-1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현황과 증진 방안(위탁과제) 황정미, 문경희, 정승희, 양혜우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28-03	
2009 연구보고서-6-2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위탁과제) 이창호, 정의철, 김경희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28-04	
2009 연구보고서-6-3	다문화 전문인력양성 현황과 정책과제 민무숙, 김이선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28-05	
2009 연구보고서-6-4	연구아시아국가의 다문화사회 형성과정과 정책추진체계(위탁과제) 한승준, 최무현, 오승은, 정준호